

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대·내외 경제 전망

□ 세계경제 : 회복세 지속, 리스크 상존

-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,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
- 글로벌 무역갈등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

〈세계경제 성장률 전망〉

(단위 : %)

구 분	‘17년	‘18년	‘19년	‘20년	‘21년	‘22년
세 계	3.7	3.9	3.9	3.9	3.8	3.7
- 선진국	2.4	2.4	2.2	1.7	1.7	1.5
- 신흥국	4.7	4.9	5.1	5.1	5.1	5.0

※ 자료 : World Economic Outlook(IMF, ‘18. 4, 7월)

□ 국내경제 : 소비·수출 증가세 지속, 성장세 소폭 둔화

-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·수출증가세가 지속되나,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
- 일자리 확대,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예상
- 다만, 미-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,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,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

2. 국가 재정운용 전략

□ 재정운용 방향

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

- 일자리, 혁신성장, 저출산 대응,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
-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* 대비 확장하여 운용

* 「2017~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: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.8%

②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

-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
- 탈루소득 과세 강화, 비과세 감면·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

③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·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

- 안전, 인권,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·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
-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,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·확대
-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·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·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

□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(사회 분야) 청년일자리, 저출산,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, 저소득,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
 - (일자리)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,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
 - (복지)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기초연금·장애인 연금 인상, 노인·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·취약계층 지원 강화,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·돌봄부담 완화 및 일·생활 균형을 대폭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
 - (교육)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양성을 촉진하고,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
 - (환경) 조기폐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
 - (문화·체육·관광) 문화 콘텐츠·스포츠·관광산업 성장기반 등을 구축하고, 문화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시설 관련 투자를 확대
- (경제 분야)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,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
 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원
 - (R&D) 기초연구·원천기술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,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집중 지원
 - (SOC)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,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
 - (농림)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, 청년 농어업인력 육성 및 스마트 팜·양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
- (행정 분야) 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
 - (일반·지방행정)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,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
 - (안전) 미세먼지,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,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

3. 중기세입 여건

-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·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, 수출·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,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
 - (지방세)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,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의 축소,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,
 - 미·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, 국제유가 상승,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,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,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 - ('18년 전망) 지방세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다만, 정부의 부동산 대책, 주택입주물량 증가,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
 - (세외수입)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,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
 - (지방이전재원)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
 - (국고보조금) 저성장, 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
-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
 -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

4. 중기세출 여건

-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, 저출산·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
 -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
 -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, 청년 노인 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,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

- 혁신성장 지원,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
 -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,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,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
 -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
 -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

- 사회적 가치 실현,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
 - 인권보호, 사회적 약자 배려,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실현·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
 - 재해·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